



## 현재 노인 삶의 모습이 주는 의미

**이동욱** | 보건복지부 전 인구정책실장

지난 주말 서점에 들러 노인에 대한 서적을 검색해 보았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젊은 노인의 탄생”, “새로운 인생 액티브 시니어”, “노후 파산” 등 상반되는 제목의 책들이 검색창에 떴다. 책 제목만으로도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특히 기존 세대와 다른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독거가구가 크게 늘었다. 독거노인은 2008년 19.7%에서 2017년 23.6%로 증가했고,

부부단독가구도 48.4%에 이른다.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발적 독거노인의 증가이다. 약 30%의 노인이 개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싶어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약 44.5%가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고령층, 저소득 독거노인의 약 80%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어려움은 과거보다 약해진 사회적 관계망 때문이기도 하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노인의 비율,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모두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앞

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본돌봄 등 공공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까지 90만 명의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가구의 학력은 높아지고 소득도 증가하고 있다. 무학인 노인의 비율이 2008년 15.3%에서 2017년 6.6%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전체 노인의 절반가량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의 부동산과 자산은 증가했고, 특히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 인상 등과 같은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해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노인의 학력과 소득의 증가는 근로 사유와 관련이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의 주된 사유는 여전히 생계비 마련이지만 그 비율은 73%로 2008년의 85.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시간 보내기 등 비경제적 사유로 근로

하는 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 직종은 여전히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노인의 욕구와 불일치하는 면이 다소 있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은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 노인들이 일을 통해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를 통한 소득 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개선,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적용 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노인 등 돌봄 필요 노인의 증가에 직결된다. 실제로 노인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수는 2.7개로 2008년 1.9개에 비해 증가하였고, 고령자일수록 인지기능 저하자가 많았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치매 검진비 지원을 통해 가족과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고,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노인 대부분이 친숙한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88.6%의 노인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57.6%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

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약 21%의 노인은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현 주거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친숙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교통 이동 지원, 식사 배달,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 친화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확대, 주택 수리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86.2%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해 10년 전의 68.3%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해 노인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노인 스스로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가생활도 좀 더 활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다. 평균 연령이 77.8세인 노장 배우들이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 노인의 여가활동이 변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TV 시청이 여전히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이었지만, 스포츠, 산책 등의 적극적인 야외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 기관인 경로당의 이용률이 2008년 46.9%에서 2017년 23.0%로 크게 낮아져, 변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

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활동적인 노인이 늘어나면서 운전을 하는 노인이 18.8%로 2011년의 12.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운전을 그만둔 연령도 2011년 57.5세에서 2018년에 62.1세로 높아졌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로 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 고령 노인과 젊은 노인, 고학력·고소득 노인과 저학력·저소득 노인 간 차이가 뚜렷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것에 대해 고소득 노인의 80%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고령 노인의 80%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인의 연령과 소득, 학력에 따라 건강, 근로 사유, 여가활동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0 시니어트렌드”의 저자 사카모토 세쓰오는 ‘일본의 1차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와 70세 이상 세대는 인종이 다르다고 비유할 만큼 다른 세대’라고 하였다.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하는 몇 년 뒤부터는 한국에서도 노인 세대 간의 차별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인 정책도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